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인구통계의 정비와 분석*

김대래 · 김호범 · 장지용 · 정이근**

<차 례>

Ⅰ. 서론
Ⅱ. 통계정비의 방법
  1. 통계정리의 대상 지역
  2. 자료의 문제
  3. 일제강점기 인구통계의 문제
  4. 정리의 문제
Ⅲ. 인구통계의 정비
  1. 부산일본거류지(거류민단) 일본인 호구
  2. 혼란을 일으키는 사례
  3. 일제강점기 부산부와 동래군의 인구
Ⅳ. 일제강점기 부산 · 동래의 인구추이
  1. 인구규모의 추이
  2. 인구증가율
  3. 일본인 인구 비율
  4. 호당 인구추이
  5. 부산거주 일본인의 원적지
Ⅴ. 결론

* 이 논문은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BS1006).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3분의 익명의 심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 김대래, 신라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제1저자/drkim@silla.ac.kr); 김호범,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교신저자/hobkim@pusan.ac.kr); 장지용, 부산대학교 강사 (공동저자/symomm@kornet.net); 정이근, 경성대학교 강사 (공동저자/jung2gun@hanmail.net).

Ⅰ. 서론

인구통계의 정비는 모든 연구의 기초이다. 그러나 합방이전 시기를 포함한 일제강점기 부산지역의 인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산시에서 간행한 자료들[1]에 일부 정리가 되어있지만, 그것은 주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초기에 집중되어 있다. 일제강점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주목할만한 성과들이 몇 편 나왔다.[2] 부산에 대한 연구사와 근년의 부산학에 대한 관심사를 감안할 때 가장 기초적인 인구에 관한 연구는 양과 질에서 아직은 매우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3]

본 논문은 이러한 부산지역 인구연구의 미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써 합방 이전[4] 시기를 포함한 일제강점기 부산과 동래지역의 인구시계열을 작성하고 분석하려고 한다. 부산만이 아니라 동래지역의 인구를 함께 정리하려는 것은 부산과 동래가 구별되지 않았던 시기와의 통계적 연속성 확보와 함께, 오늘날의 관점에서 부산의 인구를 파악하려 할 때 부산과 동래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적합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5]

해방이전 부산과 동래지역의 인구시계열의 작성을 위해 먼저 Ⅱ에서는 인구통계 정비의 방법과 통계정비의 과정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입수가능한 일차자료들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통계값 가운데에서 적합한 값을 선택하는 기준과 방법, 그리고 이에 입각한 정리의 구체적

1)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지(상)』, 1974, 904쪽, 970~971쪽;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상수도발달사』, 91~98쪽, 106쪽;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제1권』, 1989, 제6장.

2) 홍순권,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사회의 인구와 사회계층구조」,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 경계』 제51집, 2004; 김호범 외, 『20세기 부산지역 경제통계의 이해와 부산경제의 변동분석』, 부산광역시, 2004, 237~238쪽.

3) 2001년까지의 부산학 연구성과를 정리한 자료에서도 일제강점기는 물론 해방이후 부산의 전체 인구의 추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성과는 추가로 찾아보기 어렵다. 부산광역시·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학연구문헌목록집』, 2001.

4) 합방이전 시기 인구통계의 정비는 대부분 일본인만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은 어디까지나 일제강점기이다.

5) 후술하듯이 1914년 府制의 실시와 함께 부산부와 동래군으로 분리된 두 지역을 합하면 오늘날 강서구를 제외한 부산광역시의 행정구역과 거의 일치한다.

인 과정을 기술할 것이다. Ⅲ에서는 인구시계열을 작성할 것이다. Ⅳ에서는 완성된 인구시계열에 관해 개략적인 분석을 하고 그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Ⅴ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고 본 논문이 갖는 의의에 관해 서술할 것이다.

Ⅱ. 통계정비의 방법

1. 통계정리의 대상 지역

합방 전후 시기를 포함한 일제강점기 부산지역의 인구통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계정비의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된 이래 합방직후까지 행정구역은 매우 빈번한 변화가 있었다.[6] 구한국시기부터 통감부가 설치되는 1905년까지 부산과 동래지역은 동래부 또는 동래군에 속해있었다.[7] 그러다 1906년 9월에 동래부로 되었다가, 1910년 합방과 함께 부산부로 바뀌었다. 동래군→ 동래부→ 부산부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은 동일했다. 즉 동래군(동래부 또는 부산부)은 기장군과 양산군을 경계로 낙동강 동쪽의 지역을 포괄하고 있었다. 이후 1914년 府制의 실시와 더불어 당시의 부산부는 부산부[8]와 동래군으로 분할되었는데, 이때 동래군에 기장군 일원이 들어오게 되었다.[9]

부제 실시 이후 부산부와 동래군에서의 행정구역 변화는 1936년에

6) 행정구역의 변화에 관해서는 내무부, 『지방행정구역발전사』, 1979; 손정목, 『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상)』, 일지사, 1992;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지(상)』, 1974;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부산상수도발달사』, 1997을 주로 참조하였다.

7) 부산을 포함한 동래지역은 1895년 동래부 산하 동래군에 속해있었다. 그러다 1896년 동래군은 동래부가 된다. 이 동래부는 1903년에 다시 동래군이 되었다. 행정구역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8) 1914년 3월 1일 부제의 실시로 부산부에 속한 지역은 구일본거류지가 있었던 오늘날의 동광동, 광복동, 신창동, 창선동, 대교동 일대와 중국조계지가 있었던 오늘날의 초량동 그리고 영주동, 영선동, 영도지역, 범일동, 좌천동, 수정동, 대신동, 부민동, 부평동과 용당동의 일부 등이었다. 이 지역들은 후술할 부산일본거류민단구역을 모체로 하고 있었다.

9) 역사적 맥락에서 오늘날의 부산을 바라볼 때 1914년의 부제실시 당시 만들어졌던 부산부와 동래군은 사실상 오늘날 부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있었다. 이때 부산부는 동래군에 속해있던 서면지역을 흡수하여 부산진출장소를 설치하였는데, 오늘날의 남구, 진구에 속하는 지역이 이때 부산부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다시 1942년에 부산부는 동래군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동래, 사하, 수영출장소를 각각 설치하였다. 오늘날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일원이 이때 부산부로 편입되었다. 1936년 이래 행정구역의 개편은 부산부가 동래구를 잠식하는 과정이었고, 부산부+동래군의 관할구역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이상과 같은 행정구역의 변화는 인구통계의 정비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1913년까지 동래부 또는 부산부의 인구는 부제가 실시되는 1914년 이후의 부산부와는 명칭은 동일하지만 포괄범위는 다르다는 점이다. 흔히 1913년 이전의 부산부 인구가 1914년 이후의 부산부 인구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은 1913년 이전에는 이후 동래군으로 분리되는 지역의 인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1914년 부제의 실시 이후 동래군에는 이전에는 동래군(동래부 또는 부산부)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장군의 인구가 포함되게 되었다. 따라서 1914년 이후의 부산부와 동래군을 합한 인구는 이전 시기보다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통계의 정비대상 지역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부산지역 인구통계 정비대상을 종합정리한 것이 <표 1>이다. 1909년까지는 (동래군/동래부)의 인구에 기장군의 인구를 합하고, 1910~1913년까지는 부산부의 인구에 기장군의 인구를 더하고, 1914년 이후에는 부산부와 동래군의 인구를 합하면 행정구역의 개편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지역의 인구정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행정구역 변화에 따른 각 지역별 세부인구통계를 정비하되, 궁극적으로는 기장군을 포함한 부산과 동래지역의 인구를 정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자 한다.

<표 1> 행정제도 개편과 부산·동래지역 인구통계 정비

<table>
<tr><th></th><th>부산</th><th>동래</th><th>기장</th><th>동일지역</th></tr>
<tr><td>~1909</td><td colspan="2">동래군/동래부
(거류민단 포함)</td><td>기장군</td><td>(동래군/동래부)+기장군</td></tr>
<tr><td>1910~1913</td><td colspan="2">부산부(거류민단 포함)</td><td>기장군</td><td>부산부+기장군</td></tr>
<tr><td>1914~1945</td><td>부산부</td><td colspan="2">동래군</td><td>부산부+동래군</td></tr>
</table>

이러한 행정구역의 변화에 더하여 합방전후 시기 인구통계의 정비에서 많은 혼란을 가지고 오는 몇 가지 요인을 더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개항이후 한국에 건너와 거주하였던 일본인 인구에 관한 것이다. 일본인거류지와 이후의 일본거류민단[10] 인구의 경우 통계자료에서 흔히 '부산'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또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일제가 지방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적 행정체제였던 理事廳도 혼란을 주는 부분이다. 부산에는 경상도 남동부와 강원도 동부를 관할하는 부산이사청이 설치되었는데, 이 이사청은 1906년에서 1910년까지 존속하였다. 이 시기 통계는 이사청 단위로 주로 집계되었는데, 이 때에도 많은 경우 '부산'이라고 할 때 그것은 주로 부산이사청 관할을 의미하였다. 그와 함께 주요시가지 인구가 매년 제시되고 있는데, 이 통계에는 시계열 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으면, 부산과 동래지역의 인구통계는 상당한 오류를 빚기 쉽다.

10) 일본거류지 중 일본인의 수가 많은 지역은 1906년 일본거류민단으로 되는데, 부산일본거류민단도 그 중의 하나였다. 일본거류민단은 개항이후 이주한 일본인들의 밀집지역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부산만은 예외적으로 개항이전에도 일본인이 상주하였던 유일한 곳이었다. 왜와의 교역창구였던 초량왜관은 1678년에 완공되었는데, 그 넓이가 무려 110,000평이나 되었다. 이 초량왜관은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어 왜관이 폐쇄될 때까지 199년간 존속하였다. 1876년까지만 해도 한적한 곳이었던 초량왜관은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일본전관거류지로 개방되면서 급속히 도시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 일본인전관거류지역을 모체로 하여 그 밖에 일본인이 많이 진출해 있었던 절영도, 초량, 부산진, 舊館을 관할지역으로 1906년 부산거류민단이 출범하였다. 이 거류민단은 1914년 府制의 실시와 함께 폐지되었다.

2. 자료의 문제

인구통계의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계열작성이 가능한 일차 자료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시계열 작성의 일차적인 자료로는 통감부가 발간한 『제 1, 2, 3차 통감부통계연보』와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조선총독부통계연보』가 있다. 이 자료들에서 1906년 이래 기본적인 인구 자료들을 구할 수 있다. 부산부에서 발간한 『부산부세요람』과 부산상업회의소에서 나온 『부산항경제통계요람』도 상당한 인구자료를 싣고 있다. 특히 『부산부세요람』의 경우 개항 이래 일본인 거주자에 대한 자료를 싣고 있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조선총독부통계연보』를 제외한 다른 자료들은 간행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아 시계열을 작성하는데 결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시계열작성의 기본자료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를 사용하고 다른 자료들을 통해 보완을 하도록 한다.

통계자료의 정리에서 혼란과 공백이 많은 시기는 합방을 전후한 시기, 특히 1906년에서 1909년 사이의 시기이다.11) 이 시기의 통계값을 확보하고 대조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간행된 가능한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釜山府勢一斑』(1916), 『釜山を擔ぐ者』(1931), 『釜山要覽』(1912), 『韓國2大港實勢』(1905), 『부산항경제일반』(1916), 『釜山港勢一斑』(1905), 『釜山港勢要覽』, 『경상남도도세요람』(1914)12), 『경상남도안내』(1914), 『釜山仕人案內』(1915)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누락되어 있는 통계값을 확보하고 비교하도록 한다.

3. 일제강점기 인구통계의 문제13)

일제강점기 인구통계를 정비함에 있어 전제하여야 할 중요한 것은

---

11) 이 시기는 실제로 시계열을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할만한 자료들이 매우 빈약하다. 그러나 산만하고 혼란스럽지만 단편적인 통계들은 적지 않다. 이들을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최대한 정리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12) 『경남도세요람』에서는 기장급 통계를 구할 수 있다. 또 1914년 4월 1일 현재의 자료가 많이 실려 있다.

13) 일제강점기 인구통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관해서는 金 哲, 『韓國の人口と經濟』, 岩波書店, 1965, 11~15쪽 참조.

로서 일제강점기 인구통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관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가 발표하였던 인구통계의 기본은 '現住戶口' 통계였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14) 인구통계의 기본이 되고 있는 현주인구의 경우 후술하는 '국세조사'의 현재인구와 대비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현주인구라는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제강점기 현주인구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상주인구에 가까운 개념이었다. 현주호구 통계는 주로 경찰의 호구조사에 기초한 통계로써 식민지통치를 위한 편의를 위해 조사한 것이었다. 이 현주호구 조사인구는 국세조사15) 인구와 큰 차이가 나는데 그러한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호구조사가 호적조사 방식이었기 때문이다.16) 국세조사, 즉 센서스조사가 戶를 직접 방문하여 현재 살고 있는 호구를 모두 조사한 것과는 달리 호적조사는 호적에 올라있는 호구만 대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호적조사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만 신고나 호적상 기록이 없는 거주자는 통계에서 누락되게 된다. 이렇게 누락된 자들은 센서스가 이루어지는 해에 한꺼번에 통계에 잡히게 되고, 그 결과 센서스 년도에는 큰 폭의 인구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하여 현주호구통계는 實인구와 상당한 괴리를 보였는데, 보통 현주호구통계는 국세조사인구의 약 95~97% 정도에 불과하였고, 일제강점기 동안 국세조사가 이루어진 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약 150만명 전후에 달하는 큰 차이였다. 심지어 국세조사가 이루어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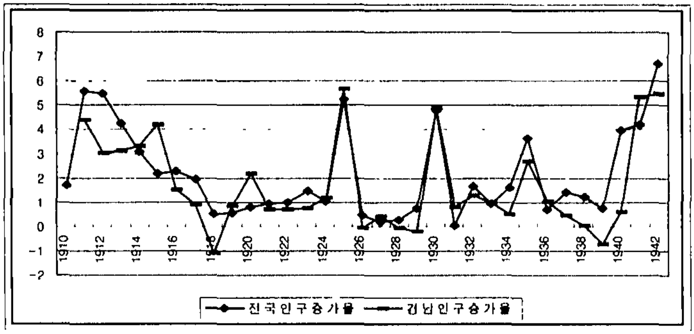
14)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실린 인구자료는 국세조사가 이루어진 해는 국세조사 인구통계이고 나머지 년도는 경찰조사에 의한 현주호구 통계이다.

15)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국세조사가 처음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은 1925년이었다. 이후 1930, 1935, 1940, 1944년에 국세조사가 시행되었다. 일본에서 처음 국세조사가 실시되었던 것은 1920년이었다. 이에 맞추어 한국에서도 1920년 국세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으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국세조사는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1944년만은 5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국세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연도의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인구자료는 연말기준이라 되어 있다.

16) 溝口敏行·梅村又次, 『旧日本植民地經濟統計-推計と分析』, 동양경제신보사, 1988, 207쪽.

해의 인구증가폭은 국세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4년간의 증가폭보다도 크게 나타난다.

<그림 1> 전국과 경남의 인구증가율(%)



이와 함께 현주호구와 실인구와의 괴리는 시기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 심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1910년에서 1914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인구의 큰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주로 식민지행정기구의 정비와 파악에 따라 새로 포착된 인구의 증가를 반영한다. 이상의 여러 문제점을 볼 때 일제강점기 연차별 인구통계로서 현주호구를 이용하는 것은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17]

<그림 1>은 이상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인구통계에 근거하여 작성한 전국과 경남의 인구증가율 추이이다. 여기에서 보면 우선 인구증가율의 연도별 편차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큰 폭의 인구증가율이 있었던 년도는 합방

17) 1925년 이래 5회에 걸쳐 국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1940년과 1944년 조사결과는 상세한 것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연차별 인구통계와 함께 호적의 신고에 기초한 동태인구조사도 1911년부터 조사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신고된 것만을 집계하였기 때문에 매우 불완전하여 1930년대 전반이전까지는 동태통계로서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한계가 있다. 인구동태통계가 본격적으로 조사된 것은 1937년 10월의 '조선인구동태조사규칙'의 발령 이후였다. 조선인구동태통계는 1937~1942년 매년 발표되었다(金 哲, 『韓國の人口と經濟』, 岩波書店, 1965, 14~15쪽).

직후의 시기와 국세조사가 이루어졌던 1925, 1930, 1935, 1940년과 그 이후의 시기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조사가 이루어졌던 시기에 큰 폭의 증가율이 있는 것은 이전에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인구가 국세조사에 의해 새로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또 1910년대를 통해 인구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합방직후 식민지 통치권력의 확립으로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인구가 합방과 함께 포착되면서 한꺼번에 대폭 증가하였다가 이후 파악되지 않았던 인구규모가 줄어들면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앞서 합방초기로 갈수록 인구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1941년과 1942년도[18]의 큰 폭의 증가율은 매우 이례적이다. 통계적인 문제를 감안한다 해도 국세조사 직후에도 계속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 일제강점기 한국 전체의 인구변동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에는 한국인의 해외이주가 있었다. 해외이주는 1934년부터 매년 10만 명을 넘어선 이래 1940년에 40만 명에 육박하는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42년에는 17만 여명으로 낮아졌다.[19] 이러한 해외이주 인구의 감소는 국내전체인구의 증가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이다.

1910년대와 1941년 이후를 제외하면 <그림 1>은 앞에서 설명한 현주호구 통계와 국세조사 통계의 차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남의 인구증가율을 전국과 비교해보면 대체로 일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비록 인구통계로써 현주호구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통계적 일관성은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0]

---

18) 김 철은 1943년까지 한국인 인구의 시계열을 제시하고 있는데, 1942년의 수치를 보면 본고에서 정리한 수치보다 작다. 그 수치를 사용할 경우 1942년의 증가율은 낮아진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金 哲, 『韓國の人口と經濟』, 岩波書店, 1965, 13쪽).

19) 김 철, 같은 책, 41쪽.

20) 1915년, 1918년 그리고 1939년에 경남은 전국통계 경향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경남의 인구는 전체인구와는 달리 사회적 이동의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일제강점기 현주호구 통계는 이처럼 국세조사에 비해 매우 불철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상세한 시계열을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실린 것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것에 기초하여 현주호구를 중심으로 부산지역의 인구통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세조사가 시행된 연도는 국세조사 인구를 기초로 하고 그 이외 연도는 경찰조사에 의한 현주호구를 근거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인구통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21] 한국전체의 인구추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보정방법이 제안된 바 있는데, 이것을 부산지역의 인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의 기본적인 방법은 1925년 이후 인구의 경우 각 센서스 기간의 인구증가율을 센서스 기간내의 각 년도에 적용하고, 1925년 이전의 인구는 1925년도 센서스 인구를 기준으로 逆算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조사가 처음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1925년 이후의 인구통계는 국세조사인구에 의해 비교적 쉽게 補正될 수 있지만, 그 이전 인구의 보정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또한 한국전체 인구를 추계하는 것과 지역의 인구를 추계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전체 인구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유입과 해외로 이주한 인구수치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한 지역에서의 유출입 즉 사회적 이동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의 인구를 경남이나 전국과 대비하여 보려 할 경우 선국은 물론 다른 모든 지역의 인구도 추계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을 요한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인구통계로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자료를 기초로 정리할 것이다.

4. 정리의 문제

입수가능한 자료를 통해 확보한 통계값에 근거하여 시계열을 작성

21) 일제강점기 인구추이에 대해서는 현주호구와 센서스 인구를 토대로 다양한 추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溝口敏行・梅村又次, 같은 책, 154쪽, 256쪽; 石南國, 『韓國の人口増加の分析』, 勁草書房, 1972, 99쪽 등에 추계에 관한 설명과 추계치가 있다.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정리한다.

첫째, 연말기준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를 한다. 연말기준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연중 어느 시점의 인구로 대신하되 별기를 하도록 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통계의 경우 연말 기준이라 되어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연말에 조사된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구자료의 정리에서 現住인구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일제강점기 인구조사는 모두 현주인구 기준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戶數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일제강점기 일부 기간에는 세대수와 함께 주거호수가 함께 조사되어 병기되었는데, 일관성과 통계적 의미에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셋째, 합방이전 시기의 경우 복수의 통계값이 많이 나타나는데, 경향성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추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아울러 복수 시계열의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복수의 시계열은 통계작성의 기준이 다른 두개 이상의 통계계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한다.

넷째, 일본인을 포함시켜 작성한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식민지도시화의 전형을 걸었던 부산은 일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였다. 따라서 한국인과 별도로 일본인 인구의 추이를 작성하고 전체 인구에 합산을 하도록 한다. 그러나 일본인을 제외한 외국인의 경우 총인구에는 포함시키고 별도로 정리하지는 않는다. 일본인을 제외한 외국인의 숫자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였기 때문이다.

다섯째, 오래된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통계자료의 오류가 매우 빈번히 나타난다. 여러 자료를 대조하여 정확한 시계열이 되도록 노력한다.

Ⅲ. 인구통계의 정비

일본에 의해 한국인 호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처음 이루어진 것은 1906년 10월이었다. 이후 매년 인구통계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합방이후 부터이다. 따라서 1907년에서 1909년까지의 인구통계는

신뢰할 만한 자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렇지만 일본거류민단이 설치되었던 지역의 일본인 호구수에 대한 자료는 이 시기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인구통계를 3단계로 나누어 정리한다. 첫째는 부산일본거류지(거류민단)의 일본인 호구에 관한 자료의 정리이다. 둘째는 합방이전의 시기에는 빈번한 행정제도의 개편과 통계작성 기준의 미확립으로 혼란스러운 계열의 인구통계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런 자료가 제공하는 인구통계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할 경우 많은 오류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혼동하기 쉬운 자료를 별도로 정리한다. 셋째는 본고의 주된 연구대상인 합방이후 부산과 동래의 인구통계를 정비한다.

1. 부산일본거류지(거류민단) 일본인 호구

개항과 함께 일본전관거류지가 조성되면서 부산으로 이주하게 된 일본인 호구수는 개항이 되었던 1876년부터 파악이 가능하다. 1876년에서 부제가 실시되기 직전년도인 1913년까지 일본인 호구수에 관한 장기간의 정보를 담고 있는 8개의 자료를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이 표에 의하면 1876년에서 1894년까지는 단일자료만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몇 개의 자료에서 제공되는 정보값이 거의 동일[22]하기 때문에 단일 시계열을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1895년부터는 두 자료 이상에서 동일한 값을 보이는 상이한 통계들이 나타나는 년도가 거의 대부분이다. 1895년에서 이후 모든 자료가 동일한 값을 보이게 되는 1912년까지 오직 3개년도만이 모두 같은 통계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895년에서 1911년까지는 단일시계열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복수의 시계열을 작성한다고 하여도 어느 계열이 통계적으로 더 우수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다만 1895~1905, 1906~1911년의 구간으로 나눌 경우, 나타날 수

22) 일부 자료, 예를 들어 1886년 호수 488의 수치는 다른 자료들과 비교할 때 명백히 448의 오기인 것 같다. 이런 예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 값들은 동일하다.

있는 두개의 시계열은 자료의 생산주체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 1895~1905년 사이의 경우 『한국2대항실세』(1905)와 『부산항세일반』(1905)이 같은 값을 보이는 반면, 여타 다른 자료들이 또 다른 계열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895~1905년 사이의 구간에서 1903년을 제외하면 차이가 나는 값들은 미세하고, 또 호수나 인구 중에서 한쪽은 같은 값을 갖는 것이 많다.

1906~1911년 구간의 경우 크게 보아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자료와 나머지 자료로 구분된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자료는 다른 자료보다 호수가 많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자료는 1912년부터 모든 자료들의 수치들이 같아지는 계열의 모태이다.

전체적으로 부산거류지(거류민단)의 일본인 호구수는 개항 이래 일관된 시계열을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개항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일본인들의 추세이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단계를 보이면서도 개항이후 일본인들의 부산이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2> 부산거류지(거류민단) 일본인 호구 추이(호, 명)

	『釜山を擔ぐ者』		『부세요람』		『부산요람』		『한국2대항실세』		『부산항세일반』		『부산항경제통계요람』		『부산항경제일반』		『조선총독부통계연보』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1876		82														
1877																
1878																
1879		700														
1880	402	2,066					402	2,066	402	2,066						
1881	426	1,925			426	1,925	426	1,925	426	1,925						
1882	306	1,519	306	1,519	306	1,519	306	1,519	306	1,519						
1883	432	1,780	432	1,780	432	1,780	432	1,780	432	1,780						
1884	430	1,750	430	1,750	430	1,750	430	1,750	430	1,750						
1885	463	1,896	463	1,896	463	1,896	463	1,896	463	1,896						
1886	488	1,957	448	1,957	448	1,957	448	1,957	448	1,957						
1887		2,006		2,006		2,006	450	2,006		2,006						
1888		2,131		2,131		2,131	462	2,131		2,131						
1889	628	3,033	628	3,033	628	3,033	628	3,033	628	3,033						
1890	728	4,344	728	4,344	728	4,344	728	4,344	728	4,344						
1891	914	5,254	914	5,254	914	5,254	914	5,254	914	5,254						
1892	938	5,110	938	5,110	938	5,110	938	5,110	938	5,110						
1893	993	4,750	993	4,750	993	4,750	993	4,750	993	4,750						
1894	906	4,028	906	4,028	906	4,028	906	4,028	906	4,028						
1895	952	4,953	953	4,953	953	4,953	953	5,035	952	5,035						
1896	986	5,423	986	5,423	986	5,423	986	5,655	986	5,655			986	5,423		

1897	1,026	6,065	1,026	6,065	1,026	6,065	1,026	6,185	1,026	6,185			1,026	6,065		
1898	1,055	6,242	1,055	6,240	1,055	6,240	1,056	6,336	1,056	6,336			1,055	6,240		
1899	1,100	6,326	1,100	6,326	1,100	6,326	1,100	6,326	1,100	6,326			1,100	6,326		
1900	1,082	6,067	1,083	6,067	1,083	6,067	1,109	6,097	1,109	6,097			1,083	6,067		
1901	1,250	7,029	1,250	7,029	1,250	7,029	1,250	7,029	1,250	7,029			1,250	7,029		
1902	1,352	9,691	1,352	9,691	1,352	9,691	1,152	9,691	1,152	9,691	1,352	9,691	1,352	9,691		
1903	1,582	11,711	1,582	11,711	1,582	11,711	1,492	11,388	1,492	11,388	1,582	11,711	1,582	11,711		
1904	1,891	11,996	1,890	11,996	1,890	11,996	1,890	11,996	1,890	11,996	1,890	11,996	1,890	11,996		
1905	2,363	13,364	2,363	13,364	2,363	13,364	1,950	12,948			2,363	13,364	2,363	13,363		
1906	2,981	15,989	2,987	15,989	2,987	15,989					2,987	15,989	2,987	15,989	3,933	15,702
1907	3,423	18,481	3,423	18,481	3,423	18,481					3,423	18,481	3,423	18,481	4,232	16,040
1908	4,213	21,292	4,213	21,292	4,213	21,292					4,213	21,291	4,213	21,292	5,083	19,666
1909	4,284	21,697	4,284	21,697	4,284	21,697					4,508	21,928	4,508	21,928	5,544	21,057
1910	4,508	21,928	4,508	21,928	4,508	21,928					4,969	23,278	4,969	23,278	6,171	23,900
1911	5,583	25,252	5,583	25,252	5,583	25,252					6,583	25,252	6,583	25,252	6,528	24,794
1912	6,826	26,586	6,826	26,586							6,826	26,586	6,826	26,586	6,826	26,586
1913	6,956	27,610	6,956	27,610							6,956	27,610	6,956	27,610	6,956	27,610

사료 : 「부산부세요람」(1912; 1922); 「부산요람」(1912); 「부산항경제일반」(1916); 「한국2대항실세」(1905); 「부산항세일반」(1905); 「부산항경제통계요람」(1921); 「釜山を擴く者」(1931);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 년도에서 작성.
주 : 1. 1876년의 일본인거주자 수가 89명이라는 서술이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안내」, 1934, p.3에 있음 2. 「부산시지(상)」(1974)에 「釜山を擴く者」(1931)와 동일한 계열의 자료가 실려있음. 「부산시지(상)」은 「부산부사원고」에서 자료를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출처가 잘 확인이 안됨. 3.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정리함.

2. 혼란을 일으키는 사례

통감부 설치에서 합방에 이르는 시기의 통계는 매우 혼란스럽고 불명확하다.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자료의 정리 대상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1906년에서 1914년까지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빈번히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동일한 행정명이라도 그 아래 정리되는 인구자료들이 포괄하는 지역은 달라지게 된다.

통계정리의 대상지역(Ⅱ 1.)에서 언급하였듯이 1905년에서 1909년 사이 '부산'이라고 되어 있는 행정단위명 밑에서 정리되는 인구통계들 가운데에는 그것이 부산거류민단에 관한 자료인지, 부산부의 자료인지 아니면 부산이사청 관할 전체를 포괄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23] 또한 주요시가지 또는 저명시가지[24] 인구자료를 정리하면서

23) 통감부 설치 이후 통계집에 부산이라고 표기되는 경우 그것은 종종 하나의 도시로서의 부산이 아니라 부산이사청 관할 전체를 의미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 자료에 따라 부산의 통계를 정리할 경우 아주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 '부산'이라는 구분아래 또 다시 '부산'이라는 구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

부산의 인구를 싣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부산인구 자료로 그대로 이용할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1906년에서 1909년 사이의 부산인구 통계의 정리에서는 부산일본거류민단 및 부산이사청 관할 그리고 부산시가지 인구의 정리에 특별히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표 3>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표 3> 주의해야 할 시계열 사례(호, 명)

부산거류지(거류민단) 구역내 現住호구						
	조선인		일본인		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1906			3,933	15,702		
1907	3,148	14,340	4,232	16,040	7,421	30,605
1908	7,450	30,810	5,083	19,666	12,575	50,698
1909	4,555	19,824	5,544	21,057	10,141	41,081
주요시가지 호구(부산)						
	조선인		일본인		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1906			3,933	15,702		
1908	7,450	30,810	5,083	19,666	12,575	50,698
1909	4,555	19,824	5,544	21,057	10,141	41,081
1910	8,925	46,370	6,371	24,605	15,354	71,353
1911	9,263	47,966	6,514	24,795	15,819	72,947
1912	5,360	23,748	6,826	26,586	12,243	50,565
1913	16,390	83,505	6,956	27,610	23,043	111,356
1914	6,098	26,653	7,115	28,254	13,259	55,094
부산이사청 인구						

은 일본거류민단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이사청을 가리키는 부산아래 일본거류민단을 지칭하는 '부산' 이외에 동래, 구포, 하단, 다대포 등이 같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일본인거류민회를 지칭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선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09년 판 79쪽에는 현주일본인 호구통계가 나오는데, 부산일본거류민단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마치 부산지역 전체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또 『제1차통감부통계연보』 1907년 판 14~15쪽에는 한국인 및 일본인 호구가 나오는데, 부산이사청 관할하에 있는 인구를 모두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산'이라 표기되어 있다.

24) 큰 도회를 나타내는 주요시가지는 저명시가지로도 불리었는데, 조사시점에 따라 인구 1만명, 3천명 이상으로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갖는 것이 아니었다.

	조선인		일본인		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1906	127,809	549,910	4,599	18,236	132,450	564,324
1907			5,204	19,734		
1908			6,561	24,534		
1909				27,039		

자료 : 「제 1, 2, 3차 통감부통계연보」,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 년도 및 「경남도세요람」에서 작성.
주 : 1. 1906년 조선인 호구수는 1906년 10월 말 현재임. 2. 1910년 이후 거류민단 구역내 일본인 호구수는 <표 2>와 동일하여 생략함.

<표 3>의 상단에는 1907~1909년 기간 사이 부산거류민단 구역내 한국인과 일본인의 호구에 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25) 그런데 <표 3>의 중단에 있는 주요시가지 호구를 보면 상단의 1908~1909년 그리고 <표 2>의 1912년 자료는 거류민단 자료와 동일하다. 1910년 이후 거류민단 구역내 호구수는 일본인만 파악할 수 있어 <표 3>의 상단에서는 생략하였는데, 구체적인 일본인 호구수치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주요시가지 호구수에서 일본인 호구수는 거류민단 호구수를 기록하고 있어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인 호구수는 매우 변동이 심하다. 1908~1913 사이의 주요시가지 한국인 호구수는 19,824명에서 83,505명 사이에 걸쳐있다. 1913년의 83,505명은 1914년 부제시행 이전의 부산부의 전체 한국인 인구보다 크다. 주요시가지 한국인 호구수의 경우 거류민단내에 거주하는 것으로부터 부산부와 인근을 포함한 지역의 한국인까지를 포함하는 매우 임의적인 기준으로 작성되었던 것 같다.

한편 <표 3>에는 부산이사청 관할하에 있는 인구규모가 정리되어 있다. 부산이사청 관할하 일본인 인구는 부산거류민단내 일본인 인구

25) 거류민단내 일본인수에 관한 것은 <표 2>에서 본 것과 동일하다. 여기서 새로 첨가된 자료는 거류민단 구역내 한국인에 관한 정보이다. 1908년에는 1907년에 비해 부산거류민단 구역내에서 1만 5천여명의 한국인이 늘어났다가, 다시 1년 후에는 1만여 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적 신뢰성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합방직전 많은 한국인들이 거류민단 지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이동이 컸던 것 같다.

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것은 부산이사청 관할하에 있는 일본인은 대부분 부산에 거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인 숫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1906년 10월 자료의 경우 부산이사청 관할하 한국인 수는 55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실제 부산+동래의 인구는 10만명에 미치지 못했다.

3. 일제강점기 부산부와 동래군의 인구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전체(동래, 기장 포함)의 인구통계 정리는 두 단계로 나누어 하였다. 1906년에서 1913년까지의 기간과 1914년 이후의 기간이다. <표 1>에서 정리방법을 시사하였듯이 1906년에서 1913년까지는 동래부(1910년부터는 부산부) 인구에 기장군 인구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1914년 이후는 부산부와 동래군의 자료를 합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합산은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아울러 부산과 동래 그리고 기장군의 각 자료도 별도로 제시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한 것이 <표 4>와 <표 5>이다.

<표 4>는 1910년 이래 부산부의 인구를 민족별로 호수와 인구수를 각각 정리한 것이다. 1910년에서 1913년 사이의 통계값이 이후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이 시기의 부산부에는 동래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래부/동래군의 인구는 1906년부터 파악이 가능하다.[26] 그러나 1907년에는 일본인 인구만이 파악가능하며 1908년과 1909년의 자료는 구할 수 없다. 1910년부터 동래부 인구는 부산부로 넘어가 기록되고 있다. 또한 1914년 부제 실시 이후 동래군으로 독립된 이후에도 1916년의 통계는 확보하기 어렵다.

<표 5>는 기장군의 인구자료와 부산+동래(+기장)의 인구시계열을 정리한 것이다. 기장군의 경우 1906년 이래 일본인 호구수의 파악이

---

26) 일본에 의한 한국인 호구조사는 1906년 10월에 있은 후 1910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1907년에서 1909년까지는 공백을 보이다가 1910년부터 시계열이 이어진다.

가능하며, 1914년 부제의 실시와 함께 동래군에 포함되면서 시계열이 끝난다. 부산+동래의 인구자료는 1906년과 1910년 이후 시계열이 가능하다. 그러나 <표 4>에서 보았듯이 1916년 동래군의 인구자료를 구할 수 없어 <표 5>의 부산+동래 시계열의 작성에서는 1916년의 동래군 인구값은 1915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1943년 이후 인구통계의 확보는 한계가 있어 수집이 가능한 통계값만 수록하였다. 부산부와 동래군의 1944년 민족별 인구수는 센서스 자료[27]에서 확보하였으며, 부산부의 경우 1945년의 전체인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 1946년 9월 자료도 참고로 제시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 일제강점기 부산·동래의 인구(호, 명)

	부산부						동래부/동래군					
전체	전체		조선인		일본인		전체		조선인		일본인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1906							16,191	78,026	12,158	61,967	4,033	16,059
1907											4,393	16,608
1908												
1909												
1910	20,492	96,428	13,973	71,114	6,461	24,936						
1911	21,087	99,833	14,169	73,514	6,875	26,130						
1912	22,209	103,737	14,908	75,397	7,244	28,019						
1913	23,091	107,344	15,637	77,823	7,397	29,280						
1914	13,259	55,094	6,098	26,653	7,115	28,254	15,431	77,622	14,904	75,574	527	2,048
1915	14,439	60,804	7,014	30,688	7,369	29,890	15,387	81,422	14,788	79,531	598	2,067
1916	14,554	61,047	7,395	32,846	7,110	28,012						
1917	14,780	61,506	7,556	33,578	7,177	27,726	15,750	85,076	15,062	82,630	687	2,443
1918	15,122	63,567	8,072	35,463	6,993	27,895	16,043	83,358	15,421	80,953	621	2,401
1919	17,103	74,138	9,478	43,424	7,575	30,499	16,149	84,108	15,491	81,553	654	2,538
1920	17,294	73,855	9,551	40,532	7,689	33,085	16,164	84,501	15,455	81,875	701	2,538
1921	17,731	76,126	9,776	41,902	7,897	33,979	16,533	85,208	15,774	82,562	748	2,617
1922	18,623	78,161	10,121	42,971	8,435	34,915	17,245	86,503	16,398	83,606	834	2,771
1923	19,043	79,552	10,372	43,886	8,596	35,360	17,347	86,458	16,460	83,509	861	2,843
1924	19,778	82,393	10,776	46,093	8,902	35,926	16,646	85,129	15,970	82,714	665	2,366
1925	23,254	103,522	13,772	63,204	9,364	39,756	17,331	89,325	16,658	86,656	668	2,672
1926	23,756	106,323	14,050	64,928	9,584	40,803	17,494	91,039	16,837	88,247	638	2,732
1927	24,878	113,092	15,212	71,343	9,533	41,144	17,638	92,780	16,977	90,249	643	2,463
1928	25,542	116,207	15,578	73,336	9,822	42,246	18,132	94,055	17,435	91,261	676	2,724

27) 1925년 이래 센서스 결과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1929	26,152	119,655	16,066	76,370	9,931	42,642	18,273	93,766	17,571	90,946	679	2,749
1930	29,301	130,397	18,813	85,585	10,347	44,273	19,773	101,272	19,023	98,220	732	2,998
1931	31,433	139,538	20,475	93,674	10,836	45,502	19,495	101,454	18,802	98,510	680	2,902
1932	33,515	148,156	21,861	99,956	11,531	47,836	19,579	102,311	18,839	99,127	726	3,150
1933	35,673	156,429	23,253	105,197	12,358	51,031	19,961	105,277	19,205	102,074	743	3,163
1934	37,267	163,814	24,505	110,275	12,699	53,338	20,430	106,925	19,714	103,909	702	2,983
1935	38,355	180,271	25,109	123,313	13,142	56,512	21,211	109,501	20,387	106,162	805	3,301
1936	43,836	206,386	29,667	146,255	14,026	59,014	18,067	93,232	17,440	90,744	611	2,456
1937	45,545	213,142	31,454	153,773	14,048	59,231	17,885	92,868	17,245	90,354	632	2,498
1938	45,596	213,744	32,214	157,875	13,352	55,767	17,735	92,924	17,158	90,460	568	2,439
1939	46,876	222,690	34,768	170,699	12,060	51,802	17,939	92,885	17,353	90,401	574	2,461
1940	50,366	240,033	37,850	185,576	12,464	54,266	18,219	94,888	17,569	91,766	642	3,098
1941	54,927	281,160	42,096	223,237	12,787	57,688	19,355	100,722	18,507	96,647	841	4,054
1942	67,798	334,318	53,677	272,610	14,064	61,436	11,140	59,661	10,938	58,850	200	809
1944	68,775	329,215		267,409		61 081	11,283	56,551		55,864		687
1945		281,160										
1946.9.	80,038	400,156										

자료 : 『제 1, 2 3차 통감부통계연보』, 『조선총독부통계연보』, 『부산부세요람』, 『경상남도도세요람』, 『조선경제연보』, 『20세기 부산지역 경제통계의 이해와 부산경제의 변동분석』, 통계청 홈페이지 등에서 작성.
주 : 1. 1906년 한국인 자료는 10월 말 기준. 2. 1916년 동래군 인구자료를 구하지 못함 3. 1906년 자료에는 일본인을 제외한 기타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1913년 이전의 자료는 조사 당시의 행정구역에 따라 1910년부터는 부산부, 그 전은 동래부에 넣어 정리함 5. 1944년 인구센서스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구함.

<표 5> 일제강점기 부산+동래의 인구(호, 명)

	부산+동래(+기장)						기장군					
	전체		조선인		일본인		전체		조선인		일본인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1906	20,024	93,525	15,977	77,426	4,047	16,099	3,833	15,499	3,819	15,459	14	40
1907					4,407	16,653					14	45
1908											14	45
1909											50	222
1910	24,604	117,990	18,025	92,479	6,521	25,133	4,112	21,562	4,052	21,365	60	197
1911	25,433	123,063	18,417	96,367	6,973	26,507	4,346	23,230	4,248	22,853	98	377
1912	26,548	127,051	19,155	98,336	7,336	28,394	4,339	23,314	4,247	22,939	92	375
1913	27,634	131,771	20,090	101,854	7,487	29,676	4,543	24,427	4,453	24,031	90	396
1914	28,690	132,716	21,002	102,227	7,642	30,302						
1915	29,826	142,226	21,802	110,219	7,967	31,957						
1916	29,941	142,469	22,183	112,377	7,708	30,079						
1917	30,530	146,582	22,618	116,208	7,864	30,169						
1918	31,165	146,925	23,493	116,416	7,614	30,296						
1919	33,252	158,246	24,969	124,977	8,229	33,037						
1920	33,458	158,356	25,006	122,407	8,390	35,623						
1921	34,264	161,334	25,550	124,464	8,645	36,596						
1922	35,868	164,664	26,519	126,667	9,269	37,686						

1923	36,390	166,010	26,832	127,455	9,457	38,203						
1924	36,424	167,522	26,746	128,807	9,567	38,292						
1925	40,585	192,847	30,430	149,760	10,022	42,428						
1926	41,250	197,362	30,887	153,175	10,222	43,535						
1927	42,516	205,872	32,189	161,602	10,176	43,607						
1928	43,674	210,262	33,013	164,597	10,498	44,970						
1929	44,425	213,421	33,637	167,316	10,610	45,391						
1930	49,074	231,669	37,836	183,805	11,079	47,271						
1931	50,928	240,992	39,277	192,184	11,516	48,404						
1932	53,094	250,467	40,700	199,083	12,257	50,986						
1933	55,634	261,706	42,458	207,271	13,101	54,194						
1934	57,697	270,739	44,219	214,184	13,401	56,321						
1935	59,566	289,772	45,496	229,475	13,947	59,813						
1936	61,903	299,618	47,107	236,999	14,637	61,470						
1937	63,430	306,010	48,699	244,127	14,680	61,729						
1938	63,331	306,668	49,372	248,335	13,920	58,206						
1939	64,815	315,575	52,121	261,100	12,634	54,263						
1940	68,585	334,921	55,419	277,342	13,106	57,364						
1941	74,282	381,882	60,603	319,884	13,628	61,742						
1942	78,938	393,979	64,615	331,460	14,264	62,245						
1944		385,766		323,273		61,768						

<표 6> 일제강점기 부산+동래의 인구(호, 명)

	부산+동래(+기장)						기장군					
	전체		조선인		일본인		전체		조선인		일본인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1906	20,024	93,525	15,977	77,426	4,047	16,099	3,833	15,499	3,819	15,459	14	40
1907					4,407	16,653					14	45
1908											14	45
1909											50	222
1910	24,604	117,990	18,025	92,479	6,521	25,133	4,112	21,562	4,052	21,365	60	197
1911	25,433	123,063	18,417	96,367	6,973	26,507	4,346	23,230	4,248	22,853	98	377
1912	26,548	127,051	19,155	98,336	7,336	28,394	4,339	23,314	4,247	22,939	92	375
1913	27,634	131,771	20,090	101,854	7,487	29,676	4,543	24,427	4,453	24,031	90	396
1914	28,690	132,716	21,002	102,227	7,642	30,302						
1915	29,826	142,226	21,802	110,219	7,967	31,967						
1916	29,941	142,469	22,183	112,377	7,708	30,079						
1917	30,530	146,582	22,618	116,208	7,864	30,169						
1918	31,165	146,925	23,493	116,416	7,614	30,296						
1919	33,252	158,246	24,969	124,977	8,229	33,037						
1920	33,458	158,356	25,006	122,407	8,390	35,623						
1921	34,264	161,334	25,550	124,464	8,645	36,596						
1922	35,868	164,664	26,519	126,667	9,269	37,686						
1923	36,390	166,010	26,832	127,455	9,457	38,203						
1924	36,424	167,522	26,746	128,807	9,567	38,292						

1925	40,585	192,847	30,430	149,760	10,022	42,428						
1926	41,250	197,362	30,887	153,175	10,222	43,535						
1927	42,516	205,872	32,189	161,602	10,176	43,607						
1928	43,674	210,262	33,013	164,597	10,498	44,970						
1929	44,425	213,421	33,637	167,316	10,610	45,391						
1930	49,074	231,669	37,836	183,805	11,079	47,271						
1931	50,928	240,992	39,277	192,184	11,516	48,404						
1932	53,094	250,467	40,700	199,083	12,257	50,986						
1933	55,634	261,706	42,458	207,271	13,101	54,194						
1934	57,697	270,739	44,219	214,184	13,401	56,321						
1935	59,566	289,772	45,496	229,475	13,947	59,813						
1936	61,903	299,618	47,107	236,999	14,637	61,470						
1937	63,430	306,010	48,699	244,127	14,680	61,729						
1938	63,331	306,668	49,372	248,335	13,920	58,206						
1939	64,815	315,575	52,121	261,100	12,634	54,263						
1940	68,585	334,921	55,419	277,342	13,106	57,364						
1941	74,282	381,882	60,603	319,884	13,628	61,742						
1942	78,938	393,979	64,615	331,460	14,264	62,245						
1944		385,766		323,273		61,768						

자료 : <표 4>와 같음
주 : 1 1916년 동래군 인구자료가 없어 1915년의 것을 사용함. 따라서 1916년의 부산+동래인구는 실제보다 낮은 수치임. 2. (부산+동래)(+기장)에는 기장군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임.

Ⅳ. 일제강점기 부산·동래의 인구 추이

1. 인구규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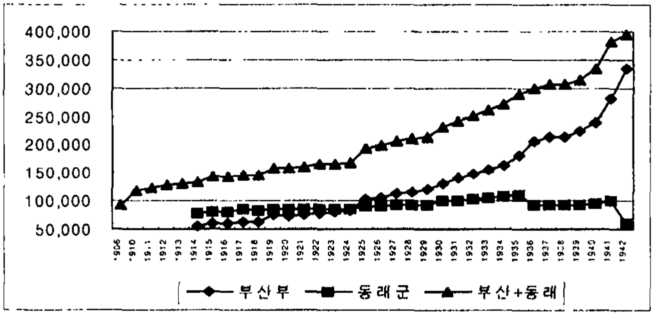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부산부와 동래군 그리고 부산부+동래군의 인구규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1914년 이래 동래군의 인구는 정체되거나 매우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부산부의 인구는 빠르게 상승하였다. 1914년 부제실시 당시 부산부의 인구는 약 5만 5천명, 동래군의 인구는 약 7만7천명으로 동래군의 인구가 더 많았다. 그러나 서서히 격차가 좁혀지다가 마침내 1925년[28]에 역전이 되어 부산부의 인구가 동래군의 인구를 추월하게 되었다.

동래군의 인구는 1936년과 1942년에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 두해 모두 동래군의 일부지역이 부산부로 편입되었다. 동래군에서의 인구감소 만큼 부산부 인구는 크게 증가한 것은 당연하다.

28) 1925년 4월 1일자로 경상남도 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하였다.

부산부와 동래군의 인구를 동시에 고려하면 1906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25년을 전기로 부산부와 동래군을 합한 인구의 증가세는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1906년 93,525명이었던 부산부+동래군의 인구는 1942년에는 393,979명으로 4.2배가 증가하였다. 부산부만을 보면 같은 기간 동안 인구증가는 6.07배에 달하였다. 1910~1942년의 기간동안 한국 전체의 인구는 1.98배, 경남의 인구는 1.71배 증가하였음을 감안하면 일제강점기 부산의 도시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부산부 · 동래군의 인구 추이(명)



그러나 전쟁 막바지에 접어든 1944년에는 부산부와 동래군의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었다. 1943년의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인구감소 추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44년에는 분명한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인의 감소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의 현저한 감소로 미루어 볼 때 일자리의 감소가 분명히 전제되었던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1943년 2월 이후 일제는 戰勢가 불리해지면서 1944년 2월부터 대대적인 기업정비와 企業疏開에 들어갔다. 기업의 통폐합과 소개는 일자리의 감소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정이 인구의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29)

29) 김인호, 『식민지 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2000, 176~181쪽. 김인호에 의하면

그리고 해방이 되던 해 부산부의 인구는 1944년에 비해 더욱 줄어들었다. 이것은 주로 일본인의 철수에 의한 것이었다. 한국인만으로 보면 1945년에는 1944년보다 상당히 증가하였다. 부산부 인구는 1946년 9월에는 급격히 팽창하였다. 부산을 통해 해외에서 귀국한 동포들이 부산에 정착하였기 때문이다.

2. 인구증가율

<그림 3>은 앞의 <그림 1>의 전국과 경남의 인구증가율에 부산의 인구증가율을 추가하여 비교한 것이다. 국세조사가 이루어진 년도와 1940년 이후에 높은 증가세가 확인이 되는 경향은 전국과 경남의 추세와 동일하지만, 부산의 증가율은 전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36년과 1942년에 높은 증가율이 있었던 것은 동래군 일부의 부산부로의 편입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표 6>에서 부산부와 동래군에서의 인구증가율 추이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부산에서 높은 인구증가율이 있었던 년도는 1915, 1919, 1925, 1930, 1935, 1940년 이후로 나타나고 있다. 1925년 이후 높은 증가율은 전국과 같이 국세조사가 이루어졌던 해와 일치하는 경향인데, 증가율의 크기는 경남이나 전국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제실시 이듬해인 1915년과 1919년에도 부산에서는 높은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제도의 개편이 새로이 이루어지면 관할 구역내 인구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1915년의 높은 증가율은 부제실시 이듬해의 결과로써 새로 설치된 부의 파악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1919년의 높은 증가율은 당시 급격한 도시화의 길을 가고 있었던 부산으로의 인구유입이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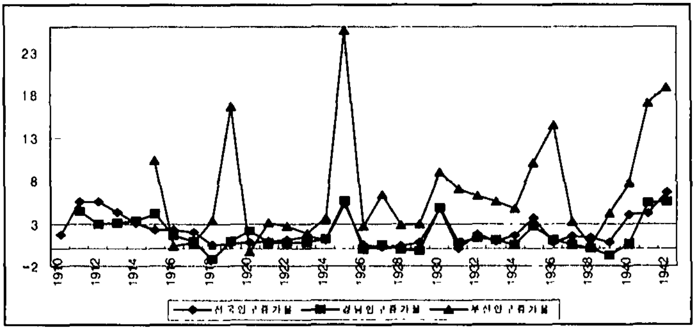
부산+동래의 인구증감율의 경우 1910년 이래 한번도 감소한 적이 없이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부산부의 경우 1920년에 유일하게 감소세

부산의 경우 1944년 7월 부산부에서 1차 정비 대상 14업종에 이어 2차 기업정비 업종을 발표했는데, 전체 업체중에서 60%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한다. 그 규모는 全廢業者가 1만명에 이르는 큰 규모였다.

를 보였는데, 이것은 특히 부산거주 한국인의 큰 폭의 감소 때문에 발생하였다. 그에 비해 동래지역에서의 한국인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부산부 내에서도 일본인은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전국적인 경향과는 달리 1919년에 부산부로 대거 유입되었던 한국인 인구가 1920년에 대폭 빠져나간 것이 3.1독립만세운동 직후의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한다.

부산부의 인구증가에 가장 특징적인 해는 1925년이었다. 이 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국세조사가 실시되어 전국적으로도 큰 폭의 인구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산의 경우는 전년에 비해 25.6%의 파격적인 증가가 있었다. 국세조사에 의한 조사의 정확성에 의한 효과를 감안한다 해도 기존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인구의 증가가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1925년은 진주에서 부산으로 도청이 이전되는 해였다. 도청이전을 계기로 부산으로의 인구집중이 크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그림 3> 전국 · 경남 · 부산부의 인구증가율(%)



1925년 이후 1941년에도 부산+동래 및 부산의 인구는 민족별 구분없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부산+동래의 인구증가율은 1941년 14%에 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이 시기에는 인구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것을 크게 상회하는 부산지역의 인구증가율은 전시경제로의 이행과 시기를 같이 하고 있다.

부산부 인구가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부산으로의 사회적 이동이 활발했기 때문이다.[30] 일반적으로 한 지역의 인구증감은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의 합에 의해 결정된다. 일제강점기 인구의 자연적 증가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31] 자연증가율을 상회하는 인구증가율은 결국 사회적 증가의 결과이다. 부산으로의 사회적 이동이 활발했다는 것은 경남에서 부산+동래의 인구가 점하는 비중의 변화에서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경남에서 부산부+동래군의 인구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1910년 8.2%에서 1941년에는 16%로 높아졌다. 이러한 부산+동래인구의 비중 증가는 주로 부산인구 비중의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경남에서 부산부 인구의 비중은 1913년 3.3%에서 1942년에는 13.5%로 높아졌다. 그러나 부산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경남인구가 점하는 비중은 일제강점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910년 전국에서 10.8%였던 경남 인구의 비중은 1942년에는 9.37%로까지 떨어졌다. 부산을 제외한 경남지역의 경우 일제강점기를 통해 가까이는 부산으로 그리고 멀리는 다른 큰 도시 또는 해외로 인구를 유출시키는 위치에 있었다.

<표 6> 인구증가율 추이(%)

	부산+동래전체	부산부 전체	동래군 전체	부산+동래 조선인	부산+동래 일본인	부산부 조선인	부산부 일본인	동래군 조선인	동래군 일본인
1911	43			42	55				
1912	32			20	7.1				
1913	3.7			3.6	45				
1914	0.7			0.4	21				
1915	7.2	10.4	4.9	7.8	5.5	15.1	5.8	5.2	0.9
1916	0.2	0.4	0.0	2.0	(5.9)	7.0	(6.3)	0.0	0.0
1917	2.9	0.8	4.5	3.4	0.3	2.2	(1.0)	3.9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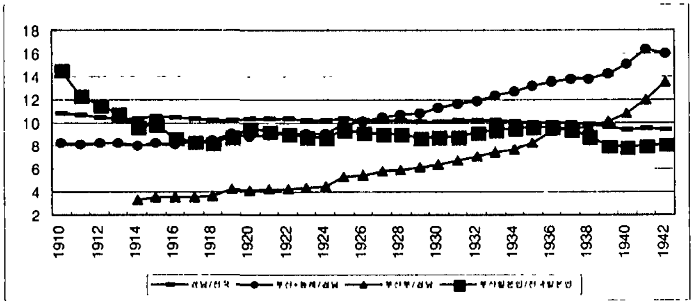
30) "한편 조선인이 지방농촌을 떠나 점차 도회에 집중하는 경향이 현저해지면서 이제 부산은 일본의 중류도시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의 인구를 포용하기에 이르렀다"는 표현 등이 그러한 사정을 말해 주고 있다(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안내』, 1934, 3쪽).

31) 홍순권, 앞의 논문, 49쪽 참조. 그러나 이 글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연증가율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1918	0.2	3.4	(2.0)	0 2	0.4	5.6	0.6	(2.0)	(1.7)
1919	7.7	16.6	0.9	7.4	9.0	22.4	9.3	0.7	5.7
1920	0.1	(0.4)	0.5	(2.1)	7.8	(6.7)	8.5	0.4	0.0
1921	1.9	3.1	0.8	1.7	2.7	3.4	2.7	0.8	3.1
1922	2.1	2.7	1.5	1.8	3.0	2 6	2.8	1.4	5.9
1923	0.8	1 8	(0.1)	0.6	1.4	2.1	1 3	(0.2)	2 6
1924	0.9	3 6	(1.5)	1.1	0.2	5.0	1.6	(1.0)	(16.8)
1925	15.1	25.6	4.9	16.3	10.8	37.1	10.7	4.6	12.9
1926	2.3	2.7	1.9	2.3	2.6	2.7	2.6	2.0	2.2
1927	4.3	6.4	1.9	5.5	0.2	9.9	0.8	2.3	(9.8)
1928	2.1	2 8	1.4	1.9	3.1	2.8	2.7	1.1	10.6
1929	1 5	3.0	(0.3)	1.7	0.9	4 1	0.9	(0.3)	0.9
1930	8.6	9.0	8.0	9.9	4.1	12.1	3.8	8.0	9.1
1931	4.0	7.0	0.2	4.6	2 4	9.5	2.8	0.3	(3.2)
1932	3.9	6.2	0 8	3 6	5 3	6.7	5.1	0 6	8.5
1933	4.5	5.6	2.9	4 1	6 3	5.2	6.7	3 0	0.4
1934	3.5	4.7	1 6	3 3	3.9	4.8	4 5	1.8	(5.7)
1935	7.0	10.0	2.4	7.1	6.2	11.8	6.0	2.2	10.7
1936	3.4	14 5	(14 9)	3 3	2.8	18 6	4 4	(14.5)	(25 6)
1937	2.1	3.3	(0.4)	3.0	0.4	5.1	0 4	(0.4)	1.7
1938	0.2	0.3	0 1	1.7	(5.7)	2.7	(5 8)	0.1	(2 4)
1939	2.9	4 2	(0.0)	5.1	(6.8)	8.1	(7 1)	(0.1)	0 9
1940	6 1	7 8	2.2	6.2	5.7	8.7	4.8	1.5	25 9
1941	14.0	17.1	6.1	15.3	7.6	20.3	6.3	5.3	30.9
1942	3 2	18.9	(40.8)	3.6	0 8	22 1	6.5	(39 1)	(80.0)

주 : 1. <표 4> 및 <표 5>에서 구함 2. 괄호안의 수치는 감소치

<그림 4> 각 인구 비중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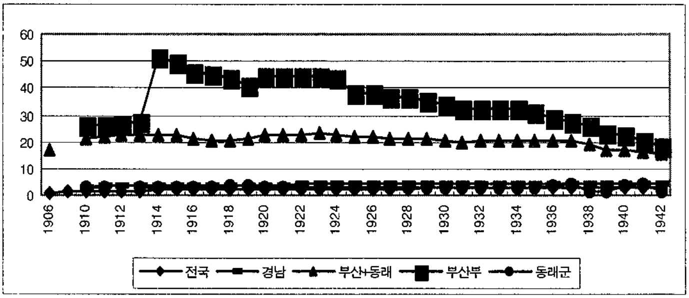


3. 일본인 인구 비율32)

한국 어느 지역보다 일본인의 이주가 빨랐던 부산이었던 만큼 식민지 초기 인구구성에서 일본인의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부제가 실시되는 1914년 부산의 일본인 비중은 51%로 절반을 상회하였다. 한 도시의 인구에서 외국인이 절반을 넘게 점한다는 것은 부산이 그 만큼 특수한 성장의 길을 걸어왔음을 말해준다.

이후 일본인의 비중은 조금씩 계속 낮아져 1935년에는 약 30%로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동래군 일부지역을 편입하였던 1936년에 30% 미만으로 떨어지고, 또 추가적인 편입이 있었던 1942년에는 20% 아래인 18%로 떨어지게 되었다.33) 결국 부산부에서 1914년 두 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일본인은 일제 말에는 5명 가운에 한명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게 되었다.34)

<그림 5> 일본인 인구의 비율(%)



32) 일본인을 제외한 인구는 모두 한국인으로 보아도 좋다. 일본인을 제외한 부산 거주 외국인은 아주 미미하였다. 따라서 100%에서 일본인 인구비율을 뺀 것은 한국인 인구비율과 거의 일치한다.

33) 일본인 인구의 비중이 떨어진다 해서 일본인의 영향력이 감소된 것은 전혀 아니다. 1940년과 1941년 말 현재 부산에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장가운데에서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공장의 비율은 약 19% 정도에 불과하였다(김대래 · 배석만, 「귀속사업체의 연속과 단절(1945~1960)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제33호, 2002. 12, 68~69쪽).

34) <그림 5>에서 1910~1913년 기간의 부산부의 일본인 인구 비중자료는 1914년 부제 실시이전의 부산부의 것으로서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과 동래지역에 해당한다. 이 비중이 부산+동래의 비중보다 높은 것은 일본인의 비중이 매우 낮았던 기장군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제의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였던 부산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일본인의 거주자가 많은 곳이었다. 한국 거주 전체 일본인 중에서 부산거주 일본인수의 비중은 합방 당시 14%에 달했다가, 1914년 이후 8~10% 사이를 유지하였다.

동래군의 경우 일본인 인구의 비율은 2%에서 4%사이로써 부산과는 엄격한 대조를 보였다. 동래군에서 일본인의 비중은 전국보다는 높은 것이지만 경남전체보다는 낮은 것이었다.[35] 바로 부산 옆에 자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래지역에 대한 일본인의 침투는 아주 미약했다.

4. 호당 인구추이

호당 인구수는 인구의 성별 구성, 주택의 소유/임차 여부 등과 함께 定住性을 파악하는 지표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민족별 지역별로 호당 인구수를 보면 특징적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 호당 인구수는 전국>동래군>경남>부산+동래>부산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반해 일본인의 호당 인구수는 부산>부산+동래>경남>동래군>전국의 순으로 한국인과는 정반대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가족구성원이 적다는 것은 완전한 단위의 가족이주가 아닌 單身移住와 같은 이동이 활발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인의 경우 부산이 호당 인구수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은 당시로서는 큰 도시에 속했던 부산으로 한국인들의 단신이주가 상당히 많았음을 말해준다. 또 일자리를 찾아 부산으로 오는 한국인과 함께 한국의 관문으로서 일본으로의 출입구였던 부산에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해 체류하는 단신이주자들도 있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인의 호당 인구수는 한국인과는 반대로 부산과 경남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았다. 이것은 부산을 비롯한 부산 인근지역에 일본인들이 정착한 역사가 오래되면서 정주성이 더 높았을 가능성을

35) 1906년 0.8%였던 전국의 일본인 인구 비율은 1910년 1.3%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40년에는 2.9%에까지 이르렀다. 경남인구에서 일본인 인구비율은 1910년 2.9%에서 1940년에는 4.1%까지 증가하였다.

시사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부산 거주 일본인들의 정주성이 낮았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36) 일제강점기 부산거주 일본인의 성별구성과 거주형태를 분석한 연구도 정주성이 매우 낮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37).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 부산거주 일본인들의 정주성은 합방이후 조금씩 높아지면서도 여전히 취약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역별 호당 인구수의 추이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부산거주 일본인의 정주성은 전국 평균이나 경남 전체 및 주변의 동래지역에 비해 높았던 것 같다.

<표 7> 호당 인구추이(명)

	조선인					일본인				
	전국	경남	부산+동래	부산부	동래군	전국	경남	부산부	부산+동래	동래군
1906	4.19		4.85			3.76			3.98	
1907						3.47			3.78	
1908						3.40				
1909	4.72					3.37				
1910	4.77	4.77	5.13			3.36	3.70		3.85	
1911	4.92	4.89	5.23			3.36	3.57		3.80	
1912	5.05	4.95	5.13			3.45	3.71		3.87	
1913	5.12	5.03	5.07			3.52	3.77		3.96	
1914	5.15	5.07	4.87	4.37	5.07	3.49	3.80	3.97	3.97	3.89
1915	5.27	5.24	5.06	4.38	5.38	3.52	3.91	4.06	4.01	3.46

36) 橋谷弘, 「釜山・仁川の形成」, 『近代日本と植民地 3』, 岩波書店, 1993, 255쪽. 1927년 부산부의 호구조사에 기초한 이 연구는 부산부 인구의 연령별 인구분포는 한국인・일본인 모두 20~30세는 여자가 많고, 35~50세는 남자가 많았다고 한다. 한국인에서 20~30세의 여자가 많은 것은 일본으로의 출가자가 많기 때문이고, 35~50세에서 남자가 많은 것은 농촌지역으로부터 도시로의 인구집중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일본인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경향은 전자는 일본으로의 유학, 후자는 한국으로의 단신도항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37) 부산의 일본인 거주자 중 여성인구 비율은 193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99%를 넘어서게 되지만 이후 곧 다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1927년에 일본인 거주자 가운데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자의 비율은 9%에 지나지 않았다(홍순권,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 사회의 인구와 사회계층구조」,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 경계』 제51집, 2004. 6, 45쪽, 52~54쪽).

1916	5.31	5.23	5.07	4.44		3.55	3.96	3.94	3.90	
1917	5.35	5.26	5.14	4.44	5.49	3.56	3.89	3.86	3.84	3.56
1918	5.31	5.15	4.96	4.39	5.25	3.60	3.97	3.99	3.98	3.87
1919	5.32	5.16	5.01	4.58	5.26	3.55	3.88	4.03	4.01	3.88
1920	5.30	5.10	4.90	4.24	5.30	3.68	4.02	4.30	4.25	3.62
1921	5.33	5.13	4.87	4.29	5.23	3.68	4.03	4.30	4.23	3.50
1922	5.31	5.11	4.78	4.25	5.10	3.61	3.92	4.14	4.07	3.32
1923	5.31	5.11	4.75	4.23	5.08	3.65	3.92	4.11	4.04	3.30
1924	5.32	5.14	4.82	4.28	5.18	3.68	3.94	4.04	4.00	3.56
1925	5.32	5.14	4.92	4.59	5.20	3.75	4.08	4.25	4.23	4.06
1926	5.34	5.16	4.96	4.62	5.24	3.78	4.11	4.26	4.26	4.28
1927	5.35	5.17	5.02	4.69	5.32	3.82	4.11	4.32	4.29	3.83
1928	5.35	5.18	4.99	4.71	5.23	3.82	4.11	4.30	4.28	4.03
1929	5.34	5.15	4.97	4.75	5.18	3.84	4.12	4.29	4.28	4.05
1930	5.35	5.15	4.86	4.55	5.16	3.97	4.14	4.28	4.27	4.10
1931	5.34	5.17	4.89	4.58	5.24	3.95	4.10	4.20	4.20	4.27
1932	5.31	5.21	4.89	4.57	5.26	4.03	4.12	4.15	4.16	4.34
1933	5.31	5.22	4.88	4.52	5.31	4.00	4.13	4.13	4.14	4.26
1934	5.32	5.21	4.84	4.50	5.27	3.97	4.14	4.20	4.20	4.25
1935	5.33	5.23	5.04	4.91	5.21	4.03	4.19	4.30	4.29	4.10
1936	5.33	5.25	5.03	4.93	5.20	3.98	4.12	4.21	4.20	4.02
1937	5.34	5.26	5.01	4.89	5.24	3.98	4.11	4.22	4.20	3.95
1938	5.35	5.29	5.03	4.90	5.27	3.99	4.09	4.18	4.18	4.29
1939	5.36	5.29	5.01	4.91	5.21	4.03	4.15	4.30	4.29	4.29
1940	5.42	5.26	5.00	4.90	5.22	4.16	4.22	4.35	4.38	4.83
1941	5.47	5.35	5.28	5.30	5.22	4.18	4.40	4.51	4.53	4.82
1942	5.56	5.38	5.13	5.08	5.38	4.20	4.31	4.37	4.36	4.05

자료 : <표 4> 및 <표 5>와 같음.

5. 부산거주 일본인의 원적지

개항 직후 부산으로 이주하였던 일본인의 다수는 대마도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1888년 부산에 거주하였던 2,628명의 일본인 가운데 833명이 대마도 출신으로 그 비율은 32%에 달하였다.[38] 개항초기 부산에 건너온 일본인의 상당부분이 대마도인이었던 것은 '부산에 이어 개항되었던 원산, 인천에 온 일본인들이 대판이나 구주본토의 상인으로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크게 틀린다. 부산에 온 일본상인들의 질은 매우 좋지 않았다'[39]고 지적될 정도였다.

38) 橋谷弘, 같은 글, 255쪽.

이후 부산거주 일본인들의 출신지 구성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들이 별로 없다. <표 8>은 1% 이상의 부산거주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縣별로 부산거주 일본인의 원적지 구성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1905년 이래 가장 많이 부산으로 이주하였던 지역은 山口縣으로 1905년 그 비중은 26%에 이르고 있다. 그 다음으로 長崎縣이 많은데, 1905년 16.7%에 이르렀던 비중은 1935년에는 13.2%로 낮아지고 있다. 대마도가 長崎縣에 속해있음을 감안할 때 일본인의 한국이주가 본격화되면서 부산거주 일본인들의 원적지별 구성에서 대마도 출신의 비중은 크게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제강점기를 통해 꾸준히 비중을 높여갔던 현은 福岡縣과 廣島縣이 대표적이었다. <표 8>의 元 자료에 따르면 1935년 12월 현재 원적지기준으로 3천명 이상의 부산거주자가 있는 현은 다섯 개였다. 山口縣이 8,594명, 長崎縣이 7,441명, 福岡縣이 5,665명, 廣島縣이 4,130명 그리고 大分縣이 3,100명으로 다섯 현을 합치면 51.2%를 점한다. 일제의 침략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은 주로 몇몇 현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으며, 이들이 한국 도시인구의 주요한 계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전국에서도 확인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산에서 더욱 강하였다. <표 8>의 16개 현출신 비중을 보면 부산에서는 80% 전후를 점한 반면 전국적으로는 1935년 현재 66%정도였다. 부산의 경우 전국에 비해 부산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縣출신들의 밀집성이 더욱 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식민지도시로서 출발한 부산의 도시화에 특수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40]

39)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지(상)』, 926쪽. 그러나 부산과 원산, 인천은 개항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위험하다. 인천과 원산이 개항되는 시기에 부산으로 이주한 일본인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영세한 대마도 상인들은 '질이 나쁜' 만큼 한국인들이 경쟁할만한 상대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40) 부산에 거주한 일본인들의 출신지에 따른 자본규모와 투자성향은 동래군을 중심으로 한 구래의 한국인 산업과의 경쟁 등에 특수한 영향을 미치면서 부산에 대한 침투를 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해서는 치밀한 연구가 진전되어야 부산의 정체성 형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표 9> 부산거주 일본인 주요원적지별 구성 추이(%)

	1905. 6.	1912. 8.	1916. 12.	1921. 12.	1931. 12.	1935. 12.	1935. 12. 전국
大坂府	4.59	3.87	2.65	2.61	2.22	2.36	1.82
兵庫縣	2.27	3.18	2.49	2.30	2.48	2.44	2.05
和歌山縣	1.08	1.21	1.33	1.17	1.17	1.15	1.17
東京府	2.27	1.90	1.66	1.38	1.71	1.79	2.26
愛知縣	1.33	1.19	1.76	2.06	1.38	1.05	2.02
島根縣	2.06	2.55	2.84	3.01	3.42	2.33	2.50
岡山縣	2.15	3.55	3.68	5.42	4.86	4.94	3.99
廣島縣	5.21	7.48	8.85	7.80	7.66	7.31	5.71
山口縣	26.04	18.59	17.35	14.12	14.89	15.21	9.34
香川縣	2.04	2.69	2.80	3.13	2.56	2.06	2.27
愛媛縣	2.13	3.63	3.79	3.83	3.81	3.46	2.96
福岡縣	6.92	7.92	9.11	8.54	8.77	10.02	8.12
長崎縣	16.74	12.59	11.57	10.16	10.90	13.17	6.28
大分縣	7.68	5.62	4.93	4.89	5.19	5.49	4.69
佐賀縣	2.54	3.76	3.82	3.43	4.26	4.37	4.62
熊本縣	2.79	3.29	3.20	3.38	3.85	4.51	6.54
	87.85	83.03	81.84	77.23	79.13	81.66	66.33

자료 : 1905년 자료는 『부산항세일반』, 241~242쪽; 1912년 자료는 부산상업회의소, 『부산요람』, 66~68쪽; 1916년 자료는 『부산부세일반』, 9~10쪽; 1921년 자료는 『부산부세요람』, 1912, 10~11쪽과 부산상업회의소, 『부산항경제통계요람』, 1922, 2~3쪽; 1931년과 1935년 자료는 『부산부세요람』 각 년도;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5년판, 39~41쪽에서 작성.

주 : 1. 1905년 자료의 경우 廣島縣에 자료가 두개가 있고, 鹿兒島縣은 누락되어 있어, 이후 년도의 추세치를 고려하여 廣島縣의 자료 하나를 鹿兒島縣의 것으로 함 2. 전체 합계의 비중이 100%가 아닌 것은 1% 이상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縣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임.

V. 결론

이상에서 해방이전의 부산과 동래지역의 인구통계를 정리하고 인구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고의 분석결과와 본 논문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일제강점기 인구통계의 시계열을 완성하였다. 빈번한 행정제도의 개편에서 오는 통계정리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날의 부산의 원형이 만들어졌던 1914년의 부산부+동래군을 정리의 기준으로 제시하여 혼란의 여지를 제거하였다.

둘째, 일제강점기 인구통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부산지역의 인구 추이에서도 확인하였다. 현주호구에 기초한 인구자료를 토대로 분석할 경우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셋째, 8개에 달하는 자료를 통해 부산거류지(거류민단)의 일본인 인구를 정리하였다. 그동안 2차 연구에서 다양하게 인용되어온 여러 자료의 일본인거류지의 호구수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다.

넷째, 합방을 전후한 시기 통계자료는 복잡한 행정제도의 개편 때문에 주의하여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시가지 인구와 이사청 산하 인구통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2차 연구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던 오류의 시정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인구의 추이를 통해 볼 때 부산은 1940년대 초에는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큰 도시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부산의 성장과는 반대로 동래는 일제강점기 동안 계속 축소되었다. 동래속의 작은 마을에 불과하였던 부산이 동래지역을 잠식해가면서 도시화를 이루어갔던 이 사례는 구래도시의 단절과 신도시의 급성장이라는 식민지도시화의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여섯째, 부제시행 당시 부산의 인구에서 일본인의 비중은 절반을 넘었다. 한 도시에서 외국인이 절반이상을 점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개항 직후 부산에 이주했던 일본인은 대마도 인이 많았다. 그러나 대마도인의 비중은 이후 낮아져갔고, 부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몇 개의 현출신자들이 균점하는 구조로 바뀌어 갔다. 일본인의 이주시기와 원적지별 구성 그리고 이주민의 성격 등은 전형적인 식민지도시로 출발한 부산의 정체성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일곱째, 호구당 인구수를 통해 정주성을 파악할 때 일본인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한국인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발판으로 일본인의 진출의 역사가 깊었던 사정과 함께, 부산은 도시화와 일본으로 건너가는 출구로서 단신 한국인 이주자들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였다.

합방이전의 일본인거주자를 포함하여 일제강점기 부산과 동래의 인구를 민족별로 정비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개략적인 분석을 하였던 본고에서는 인구문제에서 다루어야 할 많은 내용들을 포함시키지 못하

였다. 직업별인구, 남녀별 인구, 거주지역별 인구[41]와 이것을 각각 민족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또 그러한 결과를 전국의 주요한 도시들과 비교하는 일은 본고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함께 전형적으로 식민지도시로 개발되었던 부산의 인구학적 특성도 그러한 분석에 기초할 때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

* 주요어: 일제강점기, 부산일본거류민단, 인구, 부산, 동래.

41) 이와 같은 부산의 인구구성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木村健二, 「在外居留民の社會活動」, 『近代日本と植民地 5』, 岩波書店, 1993; 김경남, 「한말・일제하 부산지역의 도시형성과 공업구조의 특성」, 부산경남역사연구소, 『지역과 역사』 제5호, 1999. 2; 장선화, 「1920~30년대 부산의 공업발전과 도시구조의 변화」, 부산경남역사연구소, 『지역과 역사』 제6호, 2000. 4; 홍순권, 앞의 논문 참조.

참고문헌

경상남도, 『경상남도도세요람』, 1914, 1934.
경상남도, 『경상남도안내』, 1914.
경상남도, 『경상남도도세일반』, 1922~1923.
경상남도, 『경상남도도세일람』, 1937.
경상남도, 『경상남도통계연보』, 1921, 1925.
橋谷弘, 「釜山・仁川の形成」, 『近代日本と植民地 3』, 岩波書店, 1993.
溝口敏行・梅村又次, 『旧日本植民地經濟統計-推計と分析』, 동양경제신보사, 1988.
김경남, 「한말・일제하 부산지역의 도시형성과 공업구조의 특성」, 부산경남역사연구소, 『지역과 역사』 제5호, 1999. 2.
김대래・배석만, 「귀속사업체의 연속과 단절(1945~1960)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제33호, 2002. 12.
김용욱, 「근대 개항기의 부산행정 — 1876~1910년을 중심으로 —」, 부산시사편찬위원회, 『항도부산』 제11호, 1994.
김용욱, 「일제강점기 부산의 행정조직과 일제의 통치구조」,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항도부산』 제15호, 1998.
김인호, 『식민지 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2000.
金 哲, 『韓國の人口と經濟』, 岩波書店, 1965.
김호범 외, 『20세기 부산지역 경제통계의 이해와 부산경제의 변동분석』, 부산광역시, 2004.
木村健二, 「在外居留民の社會活動」, 『近代日本と植民地 5』, 岩波書店, 1993.
부산갑인회, 『日鮮通交史』 附 釜山史 後篇, 1916.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부산상수도발달사』, 1997.
부산광역시・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학연구문헌목록집』, 2001.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안내』, 각 년도.
부산상업회의소, 『부산항경제통계요람』, 각 년도.
부산상업회의소, 『부산요람』, 1912.
부산상업회의소, 『부산항경제일반』, 1916.
『부산항세일반』, 日韓昌文社, 1905.
부산부, 『釜山府勢要覽』, 각 년도.
부산부, 『釜山府勢一斑』, 1916.
부산시사편찬위원회, 『釜山市誌(상)』, 1974.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제1권, 1989.
石南國, 『韓國の人口增加の分析』, 勁草書房, 1972.
손정목, 『한국지방제도 · 자치사연구(상)』, 일지사, 1992.
장선화, 「1920~30년대 부산의 공업발전과 도시구조의 변화」, 부산경남역사연구소, 『지역과 역사』 제6호, 2000. 4.
井上清磨, 『釜山を擔ぐ者』, 1931.
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보』, 1948.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 년도.
통감부, 『제 1, 2, 3차 통감부통계연보』.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 DB검색』.
『한국2大港實勢』, 日韓昌文社, 1905.
행정자치부, 『지방행정구역발전사』, 2001.
홍순권,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 사회의 인구와 사회계층구조」,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 경계』 제51집, 2004. 6.

Abstract

The Arrangement of Population Statistics of Busa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Kim, Dae-Rae · Kim, Ho-Beom · Jang, Ji-Yong · Jeong, Ee-Kyen

This paper arranged the population statistics of Busan region, 1906-1944. For this we gathered all the population statistics available from elementary materials. After that we compared several statistics, and tried to find correct values. We made population time series of Busan for the first time.

On the basis of them we analyzed the trend of population, ratio of korean-japanese, the rate of population growth, and originating places of japanese immigrants.

We found out that Busan was a unique city that japanese had rooted firmly in korea. This was reflected in population trend and characteristics.

Also this paper added that population statistics before 1945 has vital problems. So to get more correct population statistics, we have to take into revision methods. We presented such methods as well.

* Key Words: Busan, Dong-rae, population, japanese residents, regional study.

논문투고일 : 2005년 9월 3일
심사완료일 : 2005년 10월 10일
게재결정일 : 2005년 10월 18일